

10.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요약)

자료제공 : 국토개발연구원

〈요 약〉

제목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시안

1. 국토계획의 성격과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국토계획의 성격

- 국토계획은 국민들의 주거·생산·여가활동을 국토공간상에 적정배치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한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는 국가계획임.
- 국토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서 제3차 국토계획은 2000년대를 앞둔 1992~2001년을 계획기간으로 함.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 1990년 1월, 국토개발연구원은 1980년대에 수립·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위탁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전담반(9개분야 총 73명)과 자문위원회(총 106명)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음.
- 1990년 9월, 국토개발연구원은 제3차 국토계획의 1차 시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서, 관련전문가 및 자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1991년 2월에 2차 시안을 작성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번 정책토론회(3월 12일~14일)에 상정.

- 본 계획 시안은 1991년 6월까지 관련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조정·보완되어 소정의 법정절차를 거친 후 1991년 12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임.

2. 제3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여 건

- 우리나라는 그간 제1, 2차 국토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속도로, 항만, 수자원 공급 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토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나 투자정도가 경제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시설부족의 애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권의 과도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가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90년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제화·개방화·첨단화의 급속한 진행, 국토 통일여건의 성숙, 또한 2001년에 1인당 GNP가 약 1만7천불로 높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의식의 다양화, 주택, 여가환경 등 국민기본복지부문에서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국토개발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국토개발의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토개발의 방향과 지침의 설정이 시급한 상황임.

□ 제3차 국토계획의 기초와 기본목표

- 제1, 2차 국토계획이 거점개발을 통한 국가성장기반의 구축, 수도권외의 성장억제 노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정비를 주된 계획기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구,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조성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상기 계획기조에 입각한 제3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음.

□ 제3차 국토계획의 추진전략

-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집중육성과 수도권외의 집중억제, ▲국토의 중서부, 서남부 지역에 신산업지대조성과 산업의 첨단화 촉진,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주택·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제도 확립,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등 6개 실천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3.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골격의 개편방향

- 과거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될 230만명의 인구중 100만명 이상을 지방에 정착시킴으로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를 점차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시키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특화육성토록 하고 농촌은 다기능적 지역으로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수도권의 집중억제시책을 강화하며, ▲산업의 상대적 취약지역이었던 국토의 서남부, 중서부지역 일대에 신산업지대를 조성·육성하고, ▲국토의 동북부지역 및 제주도 지역은 국민여가활동의 급증에 대처한 국민여가지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이들 지역의 육성·개발을 지원·선도할 수 있도록 고속교통·통신망체계를 구축토록 함.

□ 주요 정책수단

- 지방의 집중육성을 위해, ▲지방대도시에 업무단지를 조성, 특화중추관리기능을 유지하고,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를 위해 중앙에 주력산업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도시별 주력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고급인력양성과 산업·문화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도시차원의 신도시를 개발함. 또한 ▲농어촌지역에 공장, 주택, 여가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나감.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입지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계속하는 한편,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

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수도권 외로의 이전시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함. 다만, 수도권 내부의 균형을 위해 ▲위성도시의 건설 등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며, ▲신국제공항의 건설과 연계하여 국제적 기능을 보강함.

- 국토의 중서부 및 서남부지역의 신산업지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 중 총 공장용지 신규공급물량의 60%를 이 지역에 조성하며, ▲산업-기술-인력의 자급체계를 구축함. 아울러 지방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중심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
- 국토의 동북부지역과 제주도지역의 국민여가지대의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개발과 연계개발을 도모하며, ▲주요지점에 휴양거점도시를 육성토록 함.
- 통합적 고속교통망의 구축을 위해, ▲계획기간 중 약 2,100km의 격자형 간선고속도로를 신설하며, ▲경부, 호남, 영동축에 초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지역별 거점공항과 항만건설을 추진함.

4.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의 선진화

□ 기본방향

- 국민생활의 대폭적인 질적 향상과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 상하수도, 국민여가공간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환경, 수자원, 에너지, 해안역 등의 관리·보전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토록 함.

□ 주요 정책수단

- 계획기간 중, ▲GNP의 6.3%를 투입 주택 540만호를 신규로 건설·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92.6%로 제고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215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함.
- 국토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사후평가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장입지시에 환경적립금을 부과하며, ▲174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율을 70%로 제고시키며 34개 지역에 위생매

립지를 건설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지역별 확보를 도모함.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2개 댐을 신설하고, ▲14개소의 지역별 광역상수도 건설로 상수보급률을 90%로 높이며, 4개소의 공업용수도를 건설함. 또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24,000km의 상수도 노후관을 대체토록 함.
- 계획기간 중 ▲1,179km²의 해안매립을 시행하여 국토면적 10만km²를 달성하며, ▲320km²의 택지, 114km²의 공업용지 및 760km²의 공공용지를 공급함. 또한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켜 투기행위를 근절하며, ▲토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함.

5.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민통선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며,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수자원·환경분야 등에 남북 공동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함.

6. 계획의 효율적 집행

-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택, 수자원·상하수도, 교통, 공업입지 등 주요부문에 약 260조원을 투입토록 하며, ▲이를 위해 지방채의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자도입,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설치함.
- 아울러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대도시권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계획권역을 설정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고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함. 또한 ▲자율적 지역개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집행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계획·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001년의 국토거래상(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1989(A)	2001(B)	B/A	
총 량	국토면적	km ²	99,263	100,442	1.01	
	인구	천명	42,794*	47,160	1.10	
	1인당 GNP(경상가격)	\$	4,968	16,870	3.40	
인 구 분 포	수도권	추세연장	천명(%)	18,012(42.1)*	22,108(46.9)	1.23
		계 획	천명(%)	-	20,840(44.2)	1.16
	지 방	추세연장	천명(%)	24,782(57.9)*	25,052(53.1)	1.01
		계 획	천명(%)	-	26,320(55.8)	1.06
도시화	도시화율	%	77.8('88)	86.2	1.11	
공 업	공장부지	km ²	317.1('88)	474.5	1.50	
주 택	택지보급률	%	70.9	92.6	1.31	
	주택수	천호	7,032	12,067	1.72	
교 통	고속도로	km	1,551	3,659	2.36	
	도로포장률	%	71.5*	100.0	1.40	
	항만하역능력	백만톤	190	420	2.21	
	컨테이너 처리능력	천TEU	1,460	6,620	4.53	
	자동차 보급	천대	3,004*	12,000	4.00	
상하수	상수보급률	%	78	90	1.15	
	하수처리율	%	28	70	2.50	
수자원	댐 공급	10억m ³	8.3('88)	15.4	1.86	
여 가	여가활동참여량	백만명·회/년	266('88)	530	1.99	

주: * 1990년 기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3월 12일(화) —

□ 10:00~12:30

제1분과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초 및 집행전략

- 발표자: 최병선 연구위원(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 수석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 사회자: 홍성용 부원장(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강병기 교수(한양대 교수)
강영구 해설주간(문화방송 해설주간)
김덕영 국장(내무부 지방재정국장)
김 원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민병균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의택 교수(부산대 교수)
윤증현 국장(재무부 세제심의관)
이근경 과장(경제기획원 종합계획과장)
이기원 부원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이원상 감사(대한건설협회 감사)
정광모 회장(전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정제 자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14:00~16:00

제2분과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외의 집중억제

- 발표자: 박양호 수석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 사회자: 장명수 교수(전북대 교수)
- 토론자: 권원용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권호장 과장(내무부 지역정책과장)

김기욱 실장(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장)
 김도형 실장(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장)
 김 인 교수(서울대 교수)
 김형국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박석규 이사(대구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
 변도은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내수 부장(농업협동조합 조사부장)
 이정환 실장(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실장)
 임종수 부장(토지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장태옥 교수(영남대 교수)

□ 16:20~18:20

제3분과: 산업의 육성 및 배치

- 발표자: 진영환 수석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 사회자: 김안제 교수(서울대 교수)
- 토론자: 구본용 과장(상공부 지방공업과장)
 노성호 위원(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훈 단장(KIST 환경연구사업단장)
 박찬석 교수(경북대 교수)
 송경로 이사(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담당이사)
 양희승 수석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원보 국장(전라남도 지역경제국장)
 이기석 교수(서울대 교수)
 이동학 사무국장(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진행 전무이사(㈜대우 전문이사)
 진병술 담당관(과기처 기술진흥담당관)
 최택만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종태 국장(경기도 지역경제국장)

I.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초

1. 국토계획의 개요

□ 국토계획의 목적

-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의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거주, 생산, 여가활동을 국토공간상에 적정배치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한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계획기간

- 1992~2001: 10년간

□ 주요내용

- | | | |
|--|-------|--------------|
| ○ 계획의 기초: 목표,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와 지표 | ————— | 계획목표 |
| ○ 국민생활공간 체계: 도시규모별, 도·농별 개발방향 및 정책 | } | 국토골격 |
| ○ 산업의 육성·배치: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역별 공단배치·관리정책 | | |
| ○ 교통·통신망의 구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향 | | |
| ○ 국토환경 및 자원관리: 수자원, 상수도, 해안역 관리, 환경보전 등의 정책방향 | } | 국민생활
국토이용 |
| ○ 주택건설·공급: 지역별, 계층별 주택건설·공급 방향 및 정책수단 | | |
| ○ 국토이용·관리: 국토의 용도별 수요·공급 및 토지공개념의 정착 방안 | | |
| ○ 계획의 집행: 재원조달 방안 및 제도적 지원방안 | ————— | 계획집행 |

□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 1990.1: 국토개발연구원에 전담작업반(73명) 및 자문위원회(106명) 구성
- 1990.5: 관계부처 실무계획반(24개 부처청 33명) 편성
- 1990.9: 국토계획 1차시안 작성
- 1991.2: 국토계획 2차시안 작성
- 1991.1~6: 각계 의견수렴 및 확정
- 1991.7~12: 국토계획 공고

2. 제3차 국토계획의 배경과 계획의 기초

□ 배경

- 우리나라는 그간 제1차 및 제2차 국토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하부구조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였고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더욱이 '90년대는 지방자치의 실시, 국제화·개방화의 진행, 남북통일 여건의 성숙 등 국토개발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음.
-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책방향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음.

□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성 과

- 제1,2차 국토계획 기간중 공업용지는 3배, 고속도로는 2.5배, 항만하역능력이 10배로 증가하는 등 국토하부구조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었음.
- 국토이용관리법, 지방공업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개발관련 법령을 제정·정비하여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최근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도입하였음.

○ 문제점

-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도시계층간 및 도농간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밀·과소지역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가중 등 국토이용의 비효율

이 초래되고 있음.

-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물동량의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환경부문투자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질적수준이 아직 낮은 편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계획지수 비교〉

구 분	1980	1988
수 도 권	156	141
지 방	65	67

□ '90년대 국토개발의 도전적 요소

-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심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규 증가 인구의 94%(약 410만명)가 수도권에 집중 예상
 - * 남북통일이 될 경우 수도권의 인구집중 가속: 독일의 경우 매월 3만명의 인구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
-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수요급증: 계획기간 중 택지 9천 5백만평, 공장용지 3,000만평, 2배 이상의 물동량 신규수요 발생
- 개방화 및 국제적 자원보호주의에 따른 자원비용 증대: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의 국제적 개방과 원자재 도입비용의 증대로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 환경오염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할거주의의 평배 우려

□ 제3차 국토계획의 기조

- 제3차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의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고 '90년대에 예상되는 여건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기본전제 아래,
 - 첫째,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 둘째,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개방적, 효율적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며
 - 셋째, 국토의 점진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계획기조를 둬.

〈국토계획 기조의 변화〉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수립당시의 1인당 GNP	319불('72)	1,824불('82)	6,768불('92)
사회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 성장 우선 •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장과 민생추구 • 균형과 성장의 조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의 정착 • 국제화·개방화의 진전 • 통일분위기 성숙
계획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개발 및 하부구조시설 확충에 의한 국토의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의 성장억제와 지역 경제권의 육성에 의한 국토의 균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집중 육성 • 효율적, 개방적 국토이용체계 확립 • 남북 통일기반 조성

3. 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 기본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공간의 균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 국토이용의 효율성
○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 국민생활의 쾌적성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남북한간의 일체성

□ 전략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종래의 수도권억제를 통한 소극적인 국토균형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집중육성에 의해 자발적인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국토균형개발 추구

- 신산업지대의 조성파 산업의 첨단화 촉진: 국토의 중서부와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토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 강화
-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교류망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 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내의 물동량과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도모하며 지방발전 선도
- 국민생활, 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제도확립: 그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주택, 상하수도, 환경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토이용 및 보전제도를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토지공개념 정착도모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국토개발의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장치를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개발역량을 제고
-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민통선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의 개선,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의 조성,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남북 공동개발사업 등의 단계적 시행

4. 주요 정책과제

- 기본목표와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획의 효율적 집행도모
- 주요 정책과제의 선정기준
 -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재원의 대량 투입을 요하는 사업
 - 관련부문간의 체계적인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 국토계획의 목표달성에 기여도가 큰 사업

○ 주요 정책과제

과 제 명	개 계 요
1. 중소도시의 주력산업 육성	○ 도시별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자체에 대비한 지역경제력 증강
2. 신산업지대의 종합적 개발	○ 국토의 중서부,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와 배후 신도시, 연구시설, 용수공급시설, 연계교통망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국토 이용상의 효율 극대화
3.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물리적 기술적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개발 촉진
4. 전국·간선 고속도로망의 구축	○ 전국적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형성하여 국토의 서부 및 동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수요의 급증에 대처
5. 고속전철과 지역개발의 연계	○ 고속전철역과 연계하여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 유도
6. 신국제공항 건설과 국제기능의 강화	○ 신국제공항의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입지적 잇점을 활용하여 서울의 국제적 기능보강
7. 주택 540만호의 건설	○ 계획기간 중 GNP의 6.3%를 주택건설에 투자하여 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의 안정 및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대폭 향상도모
8. 국민여가지대의 조성	○ 국토의 동북부지역, 제주도지역 등에 종합적 위락시설과 휴양도시 등을 건설하여 국민여가수요에 대처하며 지역발전 촉진
9. 남북접경지역의 개발관리	○ 남북 교류공간 건설, 남북한 공동개발 사업의 수행, 남북교통망의 복원 등을 통해 남북통일에 단계적으로 대처

3. 2001년의 국토거래상(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1989(A)	2001(B)	B/A	
총 량	국토면적	km ²	99,263	100,442	1.01	
	인구	천명	42,794*	47,160	1.10	
	1인당 GNP(경상가격)	\$	4,968	16,870	3.40	
인 구 분 포	수도권	추세연장	천명(%)	18,012(42.1)*	22,108(46.9)	1.23
		계 획	천명(%)	-	20,840(44.2)	1.16
	지 방	추세연장	천명(%)	24,782(57.9)*	25,052(53.1)	1.01
		계 획	천명(%)	-	26,320(55.8)	1.06
도시화	도시화율	%	77.8('88)	86.2	1.11	
공 업	공장부지	km ²	317.1('88)	474.5	1.50	
주 택	택지보급률	%	70.9	92.6	1.31	
	주택수	천호	7,032	12,067	1.72	
교 통	고속도로	km	1,551	3,659	2.36	
	도로포장률	%	71.5*	100.0	1.40	
	항만하역능력	백만톤	190	420	2.21	
	컨테이너 처리능력	천TEU	1,460	6,620	4.53	
	자동차 보급	천대	3,004*	12,000	4.00	
상하수	상수보급률	%	78	90	1.15	
	하수처리율	%	28	70	2.50	
수자원	댐 공급	10억m ³	8.3('88)	15.4	1.86	
여 가	여가활동참여량	백만명·회/년	266('88)	530	1.99	

주: * 1990년 기준

II.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 지금까지의 국토계획들은 계획체계의 혼란, 집행체계의 미비,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 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토개발투자의 비용상승 압력은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와 투자자원조달방안의 확충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

계획수립의 배경

- 국토개발투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부문에 따라 증가율의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음.

〈경제성장과 국토개발투자〉

(단위: 10억원, '85년 가격)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평 균 ('82-'88)
국 민 총 생 산	59,322	66,803	73,004	78,088	88,196	99,447	111,575	82,347
(경제성장률)	(7.2)	(12.6)	(9.3)	(7.0)	(12.9)	(12.8)	(12.2)	(10.6)
국토개발투자	9,614	11,299	11,999	12,097	14,097	13,549	14,290	12,486
(증 가 율)	-	(17.5)	(-6.2)	(0.8)	(16.5)	(-3.9)	(5.5)	(5.0)

- 국토개발투자 중 지방정부의 투자비중이 낮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투자비중〉

(단위: %)

구 분	한 국('82~'88)	일 본('87)
중 앙 정 부	69.8	37.1
지 방 정 부	30.2	62.9

- 제2차 국토계획기간 중 도로, 항만, 주택, 환경부문의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활동의 예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계획의 기본방향

-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개발수요 증가에 대처한 국토개발투자
-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과 다양화
-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

추진계획

-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수요의 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보다 높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증대 요구는 국토개발투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3차 계획기간 중의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33~35%의 투자율과 82~88기간 중의 국토개발투자의 GNP에 대한 비중 15.2%를 감안하면 계획기간 중의 국토개발투자의 가용금액은 GNP의 18~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토개발투자의 주요부문에 대한 투자수요는 1985년 불변가격으로 약 2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부문의 투자수요〉

주요 부문	투 자 액 (10억원 85불변)	비 고
주 택	163,257	92.6%(주택보급률, 2001)
수자원및상하수도, 환경	35,817	90%(상수도보급률, 2001) 70%(하수도보급률, 2001) GNP의 1.7%
교 통	46,267	GNP의 2.5%
공 업 입 지	17,000	공장부지 3,400만평 조성
계	262,341	

○ 투자재원의 확충방안

－ 지방채의 대폭적인 활성화

- 통신, 항만, 공업입지개발, 터미널과 같은 민관협력사업에 지방채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방채에 대한 일반공모제도의 도입
- 기채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 수익채나 기업채에 대한 법적 체계의 마련

－ 민관협력을 통한 민자도입의 강력한 추진

- 지자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 형태인 제3섹터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나 토지소유자의 지분참여를 적극 유도

－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강화

- 지방정부에 의한 수자원, 원자력 발전, 대형공단, 컨테이너 등에 대한 법정의 신세목의 신설 검토
- 주민세의 소득할을 개편강화한 지방소득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검토

－ 효율적인 정부간 재정관계의 형성

- 국민적 기본수요의 충족과 지방정부의 자주 노력에 기반을 두고 지역개발사

업비 및 보조금지급의 합리화 도모

-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개발용자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강화

2.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

계획수립의 배경

- 지방화추세에 비추어 계획권한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실정의 반영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국토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타계획과의 연계체계 미비로 계획의 실천성이 저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 지역은 해당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개발에서의 국가적 통합성 저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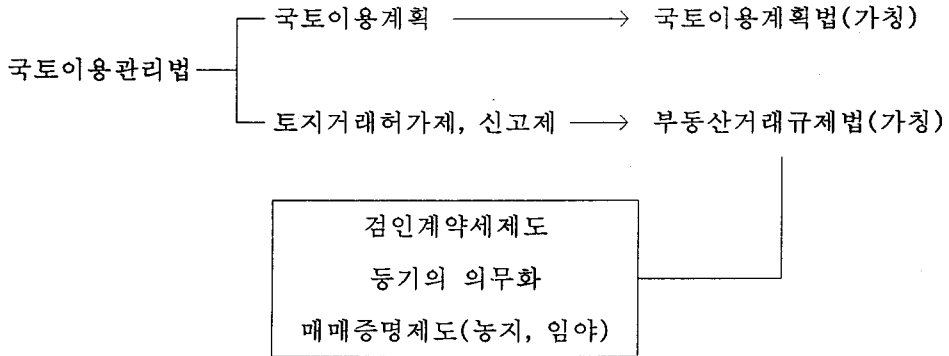
계획의 기본방향

- 자율적 지역개발체제의 정립
- 국토계획의 집행과 관련 타부문계획 및 지역계획간의 연계체계 확립

추진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개정
 - 국토계획을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분류함
 - 전국계획은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으로 함
 - 지역계획은 광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으로 분류함

○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개정함



○ 국토계획의 집행성 제고를 위해 경제계획과 국토계획의 연동화 추진

○ 광역행정체계의 구축

- 도시기반공급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역범위가 다양한 광역행정체계의 우선적 도입(예: 교통부문, 상하수도부문 등)
- 광역행정기구로는 기존의 행정협의회보다는 집행능력이 가미된 보다 강력한 기구 설치 검토
- 특별시와 직할시에 대해서 인접 도와의 광역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
-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 일본: 광역행정기구가 발행하는 지역종합정비 사업채의 특별채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의 30~35%를 지방교부세로 교부

○ 국토계획 집행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 계획협약제도의 도입 검토
 -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재정투자의 분담과 의무를 규정하는 협약의 체결
 - 계획협약은 지역개발계획의 중점과제에 한정됨.
- 국토계획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계획조정을 담당하며 집행의 원활을 위해 국토계획 수행단(가칭)의 설치 검토

Ⅲ.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1. 계획수립의 배경

- 도시화, 공업화과정에서 파생된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지방의 상대적 침체문제의 병존은 오늘날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
 - － 수도권이 행정, 취업, 우수교육기능 등에 있어서 지방을 압도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집중됨: 전국에서 새로이 늘어나는 인구수 중에서 수도권이 분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60년대: 57%, 70년대: 74%, 80년대: 85%). 이로 인하여 수도권에 주택, 토지, 환경오염, 교통, 범죄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
 - － 반면에 지방의 경우 대도시는 행정, 경제부문 등에서 중추관리기능이 극히 미약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농어촌의 낙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은 더욱 비대화되고 지방은 상대적 침체상태가 계속되어,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정에서 큰 장애가 될 것임. 특히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어 수도권은 무질서한 비대화 예상
- 따라서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지방자치, 산업과 기술의 첨단화, 전면적 도시화 추세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집중을 억제하여 전국이 능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조성하는 전략을 입안, 추진하고자 함.

2. 계획의 기본방향

- 지방의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기능을 재편함에 역점을 둠.

- 지방대도시 개발: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할 핵심도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급일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중추관리기능(행정, 기업본사, 연구, 정보 등)을 대폭 보강
- 신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개발: 산업진흥 및 인력양성계획, 대도시권 확장전망에 따라 신도시를 적절히 개발하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된 선도핵 역할이 가능하도록 중소도시에 주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을 새롭게 전문화하고 도시별 경쟁력을 키우며 지방에서의 산업기반 고도화를 촉진함.
- 농어촌개발: 농어업 부문의 개방화에 대처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어업 위주의 단일기능적 농어촌을 공업과 여가활동기능이 보장되는 다기능적 농어촌으로 전환
-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며 수도권내 지역간 기능의 재배치를 촉진함.

3. 추진계획

□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

- 지방대도시별 특화된 중추관리기능의 축적을 위한 시설 유치
 - 부산: 국제금융, 국제무역기능
 - 대구: 업무중추기능, 패션산업기능
 - 광주: 첨단산업기능, 예술·문화기능
 - 대전: 행정기능, 첨단연구기능
- 대단위 업무단지의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신시가지개발 차원에서 대단위 업무단지를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에 조성
 - 업무단지내 첨단정보망 체계구축, 도시설계에 의한 고급화된 쾌적한 환경조성, 연구·정보시설 설치, 국제기능보강, 국제항공과의 고속연결망의 확충 등 기반시설의 구축
 -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대도시별 민관합동형태(제3섹터)의 업무단지 개발기구의 설립·운영
-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산업배치 등의 종합적 광역계획·집행제도를 마련함.

□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

- 신산업지대, 국민여가대조성, 고속교통 등과 연계하여 신도시를 적절히 개발하되
- 특히 대학도시를 중점개발하여 고급인력양성 및 첨단산업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유도해 나감.

□ 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를 위해 주력산업육성 종합대책의 강구

- 도시별로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력산업장려단지를 조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도시별 특성에 따라 관광휴양도시, 대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개성과 특화기능을 갖춘 도시 형태로 발전 유도
- 주력산업진흥을 위한 인력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별 관련 대학 및 연구시설을 신설·육성
- 주력산업은 지역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육성하며 중앙정부는 금융, 재정, 기술적 지원 역할 담당
 - 지방정부: 산·학·관이 참여하는 「주력산업육성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 중앙정부: 「주력산업지원단(가칭)」 설치 운영

□ 농어촌경제의 고도화와 합리적 토지이용

- 기술집약적 소농육성 및 농어업품 수출단지의 개발, 육성으로 농어업제품의 수출기반조성
-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전업농을 육성하는 대신, 비농업진흥지역에는 공장, 주택, 여가용지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중소도시 중심의 정주권 개발로 농공단지의 추가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여가산업 진흥, 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집중억제

- 수도권 지역내 신규 대단위공업용지의 공급억제 및 대규모공장 입지 규제
- 수도권내의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균형개발에 사용
- 수도권내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수도권내 대규모 연구·연수시설 입지규제와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및 증원 억제
- 수도권 외로의 이전시설에 대한 세제·금융혜택의 강화
 - 특히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시책과 연관시켜 그룹별로 주력업종과 직결된 본사 업무기능을 생산현장지역 인근도시로 이전시에는 금융지원
- 국내적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대도시입지를 유도하되 수도권 내의 신국제 공항지역에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기능의 확충 등 국제적 기능은 일부 보강
-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현상을 완화하며, 산업시설의 재배치, 택지 및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의 기능재배치를 전제로 하여 수도권내 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비 이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계획, 집행의 조정을 위한 기능을 강화

4. 계획추진의 기대효과

- 과거 추세를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1990~2001년 중 약 230만명이 신규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육성 및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의 추진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과거추세연장 경우의 절반 정도인 약 100~12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한 계획추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시책이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계획권역을 설정

- 기존의 지역경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어긋나고 2개 이상 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지역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폐단과 부담이 생겨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 및 집행기능이 아주 미약하게 됨.
-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계획권역을 설정
- 다만 대도시의 광역화추세전망에 따라 도, 특별시, 직할시가 서로 인접한 경우는 이들 지역이 포괄되는 광역계획권역을 설정
- 9개의 계획권역설정: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
- 계획권역별로 지방정부는 투자계획과 연계된 지역개발계획수립, 집행하며 광역계획권역의 경우는 관련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
-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의 남발과 한정된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별 지역개발계획을 조정,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투자내용과 투자분담을 협약하는 계약협약제 도입

IV. 산업의 육성 및 배치

1. 계획수립의 배경

- 지난 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동안 공업단지, 용수, 배후공업도시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 공업생산 및 경제규모 성장에 크게 기여, 특히,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울산, 창원, 포항, 여천 중심의 동남해안공업벨트는 국가의 중추적 산업기지로 성장
- 그러나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별적 입지정책』 결과 수도권과 동남부지역으로의 공업투자 집중은 지역간 개발격차 문제야기

- 특히 80년대들어 수도권지역으로의 공업집중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1980년에 전국공업생산의 38.6%와 전국제조업고용의 45.9%를 차지하던 것이 1988년에는 각각 44.1%와 48.5%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한편, 90년대에도 1차산업으로부터 2, 3차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부문 중 조립가공업종과 첨단기술산업, 3차산업 중 연구개발, 정보처리 등 생산지원 서비스분야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

2. 계획의 기본방향

- 90년대 공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공업발전에 있음.
 -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지방공업 육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 환경보전, 자원관리 등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3. 추진계획

가. 주요 추진전략

□ 수도권공업입지의 적정관리

-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신규공업입지는 지속적으로 억제하며, 특히 지방입지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지방분산 촉진
- 수도권내의 중소기업 이전공장수요 등 기업의 높은 입지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유도권역내 계획공단을 조기에 개발하고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소규모 공단 계획적 조성공급
-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임대공단의 공급확대

□ 신산업지대의 계획적 육성

- 수도권 공업억제정책과 함께 중부지역, 서남부지역을 90년대의 『신산업지대』로 계획적 육성

- 이들 지역의 경우 '70, 80년대에는 공업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아산, 군장, 대불 등 항만 및 임해거점공단 조성, 간척매립에 의한 저렴한 용지 확보, 지역주민의 공업개발에 대한 높은 열기 등으로 공업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짐.
- 『중서부 신산업지대』의 경우 아산, 군장, 대전 등에 산업 및 기술발전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공장을 우선적으로 수용
- 『서남부 신산업지대』의 경우 광주, 대불, 광양 등 산업거점기지를 중심으로 동남 해안공업벨트의 개발효과를 서쪽방향으로 확산
- 아산만, 군장, 대불, 광양만지역 등 산업거점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공단, 도로, 항만, 용수, 배후도시를 포함한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첨단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

- 지방대도시 주변지역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 광주, 대전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대규모의 종합적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부산, 대구, 전주, 청주 등에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첨단생산기능 위주의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현장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기술혁신센터로 개발

□ 『생산-기술-인력』의 지역내 공급체계 구축

- 지난 1, 2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공업 발전을 위하여 물리적인 공단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나, 3차계획에서는 지방대학의 적극육성, 산학협동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생산-기술-인력』의 지역내 자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 재고

나. 공장용지 수급계획

- 1991~2001년간 신규 공장용지 수요는 약 90.1km²로 예상되며, 공장용지의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계획기간동안 약 114km²의 공장용지 공급
- 이는 1991년의 공장용지 선공급물량이 약 2년치인 15.6km²인데 비하여 2001년에 4.6년치인 40.0km²의 선공급물량을 확보

〈전국 공장용지 수급계획〉

(단위: km²)

구 분	1988	1991	1996	2001	1992~2001
수 요(A)	317.1	344.4	389.7	434.5	90.1
공 급(B)	330.1	360.1	421.0	474.5	114.4
계 획 입 지	166.3	191.0	230.8	272.8	81.8
자 유 입 지	163.8	169.1	190.8	201.6	32.5
(B-A)	13.0 (1.5년분)	15.6 (1.8년분)	31.3 (3.6년분)	40.0 (4.6년분)	-

- 수도권외의 경우 새로운 계획입지의 공급은 억제하되 기존에 계획중인 발안, 안중, 아산공단 등을 조기에 개발하여 기업의 높은 입지수요에 대처
- 계획기간 전체 공급물량 중 25.5%인 30.0km²를 중부지역에, 그리고 34.8%인 39.8km²를 서남부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신산업지대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유도
- 동남부지역의 경우 기존공단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고, 부산 주변지역에 명지·녹산 등의 공단을 조성하여 이전공장 수용

다. 공장용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 90년대 공장용지 공급은 공공부문에 의한 계획입지 뿐 아니라 자유입지 허용, 공공과 민간과의 합동개발, 민간공단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 기업의 자유입지 또는 민간공단 개발시 개발이익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도로 등 관련기반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토록 유도
- 공장입지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환경관리적립금」을 설치 운용하여 시장, 군수가 능동적으로 기업과 주민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토록 유도

4. 계획 추진의 기대효과

- 이와 같은 공업입지계획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2001년의 공업생산액은 1988년의 2배에 가까운 210조원에 달할 것이며 제조업고용은 400만인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간의 공업격차도 상당히 완화되어 수도권의 공업생산 비중이 1988년 44.2%에서 2001년에는 35%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중부지역 및 서남부지역의 공업비중은 15.6%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계획기간 중 새로이 발생되는 약 65만인의 제조업 고용 중 약 50%인 32만인 규모의 취업기회가 신산업지대내에서 발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3월 13일(수) —

□ 10:00~12:30

제4분과 :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발표자: 음성직 수석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이수성 연구위원(통신개발연구원)
- 사회자: 황용주 교수(중앙대 건설대학원장)
- 토론자: 강창언 교수(연세대 교수)
민중기 부장(대한상공회의소 유통부장)
박태권 부원장(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방석현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 완 교수(연세대 교수)
이승환 교수(아주대 교수)

이정구 과장(철도청 경영분석과장)
이헌석 국장(교통부 항공국장)
이행원 논설위원(한국일보 논설위원)
임강원 교수(서울대 교수)
전일수 연구위원(해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4:00~16:00

제5분과 : 환경보전 및 국토자원관리

- 발표자: 윤양수 수석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 사회자: 노응희 교수(서울대 교수)
- 토론자: 김갑수 실장(건설기술연구원 환경실장)
김기원 사장(경주개발공사 사장)
남동우 국장(강원도 지역경제국장)
박영쾌 부장(수자원공사 조사계획1부장)
임육기 과장(동자부 에너지정책과장)
심동로 과장(산림청 경영계획과장)
심재곤 과장(환경처 정책조정과장)
안원태 원장(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
유병립 교수(서울대 교수)
김상종 교수(서울대 교수)
이영식 과장(교통부 국민관광과장)
정진기 논설위원(국민일보 논설위원)
하진규 과장(건설부 수자원과장)

V. 통합적 고속교통망의 구축

I. 교통망의 확충

1. 계획수립의 배경

- 지난 '80년대의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교통부문 투자비 비중은 2.2%로 '70년대의 1.6%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미국, 일본 등 외국의 3~4%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임. 특히 '80년대 후반기('87~'89)의 투자비중은 2.1%로 전반기('82~'86)의 2.4%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교통부문의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비해 교통투자가 저조하여 도로의 경우 애로구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철도의 경우 간선철도의 수송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었으며, 항만도 하역능력 부족 및 연계수송체계 미흡으로 체선 및 체화에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90년말 현재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애로구간은 고속도로 530km 등 국도, 지방도를 포함하여 모두 3,092km에 이르며, 이 애로구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1991년 1년 동안에만 고속도로는 3,800억원, 국도는 1조 7,000억원 등 모두 2조 2,5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항만의 체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6,000억원에 달하며, 1989년 수출입화물 중 인천항과 부산항의 입출항 선박 중 평균 17%가 체선하여 그 비용이 각각 390억원, 130억원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의 증가,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 등 선사의 간접비용은 지연된 화물가격의 3% 수준으로 연간 4,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됨.
-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애로현상을 타개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방분산형 국토이용구조의 실현, 산업의 첨단·고도화에 따른 입지변화, 승용차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대의 정보화사회, 고소득사회의 기반이 되는 「전국의 만나질 교통권화」를 촉진할 「고속교통망」 형성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2. 계획의 기본방향

- 2000년대의 고도로 생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국의 반나절 교통권화」를 이룰 수 있는 고속간선망을 형성하되 남북한간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간선교통체계를 형성함.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요사업인 새로운 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신공항, 항만 등과 배후 지역도 원활히 연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함.

3. 추진계획

□ 간선도로망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선도로망체계를 구상하되 「9개 동서축, 7개 남북축의 전국격자형+대도시중심 방사순환형+전국환상형」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고속 간선도로망체계를 형성함.
- 2001년까지 고속도로신설 2,100km, 확장 680km 및 국도확장 7,100km 등 간선망의 확충을 추진하여 남북축의 경우는 대부분 구간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2001년 이후에도 용량초과 구간에 대한 확장, 일부 동서축의 신설 등 간선망 확충을 계속함.
- '90년말 현재 전국도로망의 포장률 71.5%를 2001년에는 100%로 제고시키며, 특히 국도, 지방도 등은 '90년대 초반에 포장률 100%를 달성토록 함.
- 농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을 선도 지원하기 위한 법정도로망을 확대하고 확포장 및 간선도로 연계 등 질적 개선을 도모함.

2001년까지의 도로개발

- 9개 동서축, 7개 남북축의 격자형 간선골격망의 기본틀 완성
- 고속도로 신설 2,100km, 확장 680km
- 국도확장 7,100km
- 전국도로의 포장률 100% 달성

□ 간선철도망

- 기존간선철도망은 지속적인 선형개량, 전철화, 복선화 및 신호체계개선 등으로 수송능력을 향상시켜 중단거리 여객수송 및 중장거리 화물수송을 담당토록 함.
- 고속전철망은 대량교통수요축인 경부축, 호남축, 영동축을 기본으로 형성하되, 교통수요, 지역개발에 대한 영향,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연결 철도인 경의선, 경원선의 복구를 검토함.

□ 항만

- 대 북방 교역 및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인천항, 동해항 등 기존항만을 확충하고, 아산항, 군장신항, 대불항 등 새로운 국제교역 항만을 건설하며, 광양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여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처리의 중심항으로 함.
- 지역별 거점항만의 개발
 - 수도권: 인천항, 아산항
 - 중부지역: 군·장신항
 - 서남부지역: 광양항, 목포항
 - 동남부지역: 부산항, 울산항
 - 강원지역: 동해항
 - 제주지역: 제주항

□ 공항

- 신국제공항
 - 신공항은 구라파, 미주 등 장거리 국제노선을 위주로 취항케 하고 세계 항공사의 중간기착지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여 국제화시대의 중추 기능을 담당토록 함.
 - 신공항의 중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국제공항지역에 공항 및 항공관련 사업을 유치한 신도시를 건설하되, 24시간 개방형의 무역, 금융,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다목적 배후국제도시로 개발함.
 - 서울과 1시간 이내의 연결이 가능토록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되, 서울유입 교통량을 가능한 한 분산하여 수도권 교통체계에의 영향을 극소화함.
- 지역별 국제공항을 확충하되 지역의 거점도시 인근에 지역특성에 따라 국제적 관

광지,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국제공항을 개발하며, 앞으로의 여객수요에 따라 제주신공항, 청주신공항 및 동·서해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함.

□ 교통체계

- 화물유통과 관련한 수송, 보관, 하역의 일관화, 수송 및 유통관련 장비의 표준화를 위해 화물유통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
- 수출입 및 국내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수송수단을 연계하며, 유통기능에 관한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하며, 전국의 주요도시에 지역거점 화물단지를 조성함.

□ 도시교통

- 도로교통혼잡 가중 및 에너지자원 수급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수송효율이 높은 대량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 도시내 및 지역간 교통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도로교통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함.
- 도시내부 및 외곽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간선도로의 고속화를 추진하며 도로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II. 고도정보·통신망의 확충

1. 계획수립의 배경

- 80년대 들어서 매년 100만회선 이상의 통신시설 공급으로 1987년 전국 전화의 자동화 및 전화적체를 완전 해소하고, 1가구 1전화 보급으로 통신선진국에 진입(세계 10위)하였으나, 지역간 전화가입자수 및 이용도수에 지역격차가 심함.
- 그동안 기본통신수요 충족에 급급하여 부가가치 통신 등 고도 통신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됨.

2. 계획의 기본방향

- 정보화와 지역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균형적 확산, 원활한 지역간 정보교류 등을 도모하여 전국토에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고도정보·통신체계를 조성함.

3. 추진계획

- 전국적인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조속한 구축
 - '9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전개, '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 확대
 - 정보통신의 고도화로 증가할 국제적 정보유통을 전국에서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위성통신의 발사, 운영. 해저광케이블의 구축확장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체계의 정비와 국제협력증진 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
 - 지역별 중심도시의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산업단지(텔레포트)를 건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VI. 환경보전 및 국토자원관리

1. 계획수립의 배경

- 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국토개발 및 자원이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투자액은 매우 저조

《GNP 대 환경부문 투자액(1990)》

한국: 0.13%, 일본: 0.34%, 미국: 0.57%, 스웨덴: 1.69%

-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용수수요의 집중화 및 대량화가 요구되나 수자원의 계절별 편중 및 지역별 부존량의 불균형으로 개발추진에 많은 애로
- 자원개발시설이나 환경정화시설 설치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천에 어려움
- 국제환경문제의 정치·쟁점화로 신에너지의 개발, 산업구조혁신, 국민의식전환 등의 행동전략 필요
- 장기적, 종합적 안목에서 환경보전과 한정된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가 기본전제로 되어야 함.

2. 환경보전

□ 동향 및 문제점

-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종합적 접근과 근본적 대응책은 미흡
 - 주요도시 및 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심화 및 기준치초과(SO₂, TSP)
 - 상수취수원인 호소와 하천은 대부분 2내지 3급수
 - 폐기물 매립지 부족 및 민원야기에 따른 부지확보 곤란
- 지구온실화, 산성비 등 국제환경문제의 협약규제 점차 강화

□ 기본방향

- 각종 개발정책을 환경보전 대책과 연계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 환경기준의 강화와 환경오염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등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환경규제에 능동적 대처

□ 추진계획

-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개선
 - 대상사업을 현재 11개 분야에서 산지개발 및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을 포함

20개 분야로 확대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참여제도 도입

- 평가협약내용의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기능의 강화
-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연차별 강화
- 환경 정화시설의 확충
 - 단계별로 174개 시·읍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건설하여 하수처리율을 28%에서 70%로 제고
 - 광역위생매립지, 소각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확보
- 기술혁신, 국민생활 양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처

3. 수자원 개발

동향 및 문제점

- 강수량의 지역별, 계절별 편차로 수자원 이용 및 관리상 어려움 상존
- 수자원 이용총량은 약 250억톤/년으로 총 강우량의 20%에 해당하며 2001년까지 약 81억톤의 신규수요발생 전망
- 상수취수원 중 15%만 1등급으로 양질의 상수 공급 곤란

기본방향

- 유역간 지역간 용수의 균형개발로 지역별 안정적 용수 공급
- 종합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방지 기능 강화
-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및 급수혜택의 평준화

추진계획

- 수계별 댐건설을 통한 용수 공급 확대
 - 총 12개 댐(공사중 포함) 39억톤 공급량 확보
- 기간 중 8,505km의 하천개수로 개수율을 53.2%에서 77%로 제고
- 14개소의 지역별 광역상수도, 4개소의 공업용수도 건설(군장, 충남해안 등)
- 도시지역 급수확대 및 간이상수도의 법정상수도 전환: 13.7백만톤/일 공급
- 상수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약 24,000km의 노후관 대체

4. 에너지 개발 관리

□ 동향 및 문제점

- 총 에너지 수요는 1988년의 75.4백만 TOE에서 약 2배로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외의존도 심화
- 수송부문의 소비증가가 현저하며 석유의존도는 50%를 유지하여 계속 주종 에너지로의 역할 담당

□ 추진계획

- 에너지 비축시설 및 원전시설을 엄격한 입지 심사를 거쳐 증설
 - 기간 중 28개소 약 20,000MW 용량의 신규 전원 설치
 - 석유비축설비를 현재의 3배 규모로 확장
 - 천연가스의 수입터미널을 1~2개소 확충하고 시베리아산 천연가스의 동해안 통과 배관망 설치 검토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및 토지이용구조 모색
 - 대도시 및 신도시 지역에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제 도입

5. 여가공간 조성

□ 동향 및 문제점

- 소득수준 향상, 자동차 보급증대,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활동은 생활의 필수요소로 등장
-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활동량은 88년 대비 약 2배 증가 전망
- 자연속에서의 휴식활동 외에 문화, 건강증진, 자기계발, 사회참가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이고 창조적 활동으로 변화
 - 스포츠 및 휴식형 여가활동 증대(도시공원 이용, 수변활동, 야영, 골프, 스키 등)
- 여가공간과 시설은 공급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으며 다양성 구비 미흡
 - 도시공원 조성률 36.4%, 자연공원 투자조성실적: 34.9%

《공원율(199)》

서울: 1.1%(자연공원 제외), 동경: 4.0%, 파리: 26.9%, 뉴욕: 13.1%

□ 기본방향

- 여가수요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 전국적으로 다양한 휴식·위락공간 개발
-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민여가지대 조성

□ 추진계획

- 여가수요, 이용권 및 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광위락 권역 개발
 - 대도시 이용권: 대도시 주변 1~2시간거리내 휴식·위락공간 개발
 - 전국적 관광권: 지역별 자연특성을 활용 권역별로 중심지역에 종합휴양단지 개발(설악권 등 17개 권역)
 - 관광·위락권 개발과 역사문화권 연계개발(백제문화권 등 5개)
-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지대 조성
 - 동북부지역: • 체류형, 휴양형, 교육형 여가공간으로 개발
 - 지역과 자원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발
 - 권역별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속초, 강릉, 춘천 등)
 - 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개발과 연계
 - 제주도지역: • 섬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간주하여 체계적 개발
 - 독특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 성산포 관광단지 및 지정 관광지구의 적극 개발 추진
- 공원관리 체계의 개선
 - 도시공원기능의 확대 및 자연공원의 보전적, 교육적 기능확대
- 위락공간 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의 연계화 방안 강구

6. 해안역 이용과 관리

□ 동향 및 문제점

- 국토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과 개발이 용이한 수심 20m 이내에 수역만도 21천 km²로 추정되어 많은 개발잠재력 보유
- 산업입지의 임해지향적 배치, 항만, 도시개발 등 간척매립을 통한 개발수요증대: 해안토지개발 년 4.6% 증가

□ 기본방향

- 해안역 이용 수요증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에 대처하여 해안이용과 보전 질서 확립
-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조직 정비

□ 추진계획

- 이용가능 수역의 이용률은 28%에서 37% 수준으로 제고하고 이를 위한 해안매립계획의 수립 및 집행(대상면적: 1,179km²)
- 해안 용도지구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해안관리법」 제정
- 해안역 이용·개발의 통제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7. 산림자원

□ 동향 및 문제점

- 81년 이후 매년 7~8천ha의 산림이 감소하여 2001년에는 현재보다 7% 감소한 6,015천 ha로 전망
- 용재생산의 가능한 산림면적은 573천ha로 전체산림 면적의 10%에 불과하여 국토녹화는 성공하였으나 임업생산수준 및 산림환경 기능은 기초단계

□ 기본방향

-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임업의 진흥과 산촌소득개발 추진
-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및 이용의 확대

□ 추진계획

- 경제수 위주의 질적조립으로 인공림율을 35%로 확대
- 산림부산물 생산단지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다목적 이용개발
- 산림경영제도의 개선 및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 임도를 증설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지역산업도로 역할 도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3월 14일(목) —

□ 10:00~12:00

제6분과 : 국민주거수준의 향상

- 발표자: 김정호 연구위원(국토개발연구원)
- 사회자: 황명찬 교수(건국대 대학원장)
- 토론자: 김만균 대표이사(덕원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배한 전무((주)한양 전무)
김종구 실장(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부 소비생활연구실장)
노정현 교수(연세대 교수)
송순태 과장(보사부 생활보호과장)
여홍구 교수(한양대 교수)
원세훈 과장(서울시 주택계획과장)
이달곤 교수(서울대 교수)
장영희 박사(대한주택공사)
정병수 위원(문화방송 해설위원)
최상태 부국장(서울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2. 계획의 기본방향

공급확대

- 신축주택공급 확대
- 기존주택의 보전 및 주거수준 향상

소득계층간, 지역간, 점유행태간 주거수준의 격차 완화

- 최저(적정)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 － 최저 이하 계층을 최저수준으로 유도
 - － 최저수준 계층은 적정수준으로 유도
- “호화” 또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소비는 억제

주택가격의 안정

- 근본적으로 물량 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 주택거래/유통질서 확립
-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택의 수급을 간접적으로 조절

3. 추진계획

계획의 목표

- 신축: 1991~2001 기간중 총 538만호를 건설, 보급률(보통가구 기준)을 1989년의 70.9%에서 92.6%로 제고
 - － 이중 약 4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1980년대: 12%)
 - － 신축주택의 규모는 평균 23평(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고
 - － 총물량 중 35.1%를 수도권에 건설하여 보급률을 현재의 68.1% 수준에서 70.4%로 제고
 - － 이를 위해 최소 전국적으로 9,500만평의 택지 소요

〈참고: 일본과 한국의 주택규모 비교〉

(단위: 평)

구 분	한 국('85)			일 본('83)		
	전 국	시 부	서 울	전 국	동경도	동경 23구
주택호당 평균연면적	22.3	25.6	28.5	26.0 ¹⁾ 27.2 ²⁾	22.0 ³⁾	16.9
1인당 주택면적	3.4	3.3	3.6	4.3	3.6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

일본총무청 통계국, 「주택통계조사」, 소화 58년(1983)

주: 1) 1983

2) 1988

3) 3대 도시권(동경,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고베 등)의 평균

〈지역별 보급률 전망〉

(단위: %)

연 도	전 국	수도권	부 산	대 전	대 구	광 주
1992	76.6	68.1	61.8	77.9	71.1	78.6
1996	82.3	68.7	71.2	84.3	79.9	84.3
2001	92.6	70.4	83.5	93.0	92.5	92.0

○ 기존주택의 보전

- 개·보수, 증·개축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존주택 재고의 효율적, 경제적 이용촉진: 특히 10~25년된 주택인 경우 구조적인 개·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현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확대 적용)
- 주택의 경제 수명을 늘리고 기존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기적인 주택점검 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주택조례를 입법화하여 주택관리를 강화토록 촉진
- 저소득층 및 중산화 가능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확대 보급

〈임대주택 건설 계획〉

(단위: 천호)

구 분	영구임대 (10%)	소형임대 (20%)	중형임대 (10%)	총 임대주택소요 (40%)
1992	40.00	80.00	40.00	160.00
1996	52.47	104.94	52.47	209.88
2001	70.31	140.62	70.31	281.24
'92~2001	538.01	1,076.02	538.01	2,152.04

□ 정책방안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는 각종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주택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주택의 계획, 집행, 행정업무를 수행. 단, 업무수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체계를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이원화하고 공공주택은 전액 정부가 지원/투자하는 영구임대주택만으로 국한하고 민영주택은 다시 정부지원 민영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누어 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위임. 중산화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택지 및 기타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강화(소득계층별 주택공급 체계 강화)
- 주택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확대 공급을 기하는 동시에 주택생산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도심토지의 효율적, 입체적,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지구제, 도시계획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택지문제는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 광역적으로 해결하되 신도시 개념을 이용할 경우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하도록 함.
- 주택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자재와 건설인력의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산업의 육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술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자재산업을 육성하고 공법개발을 적극 유도
- 민간주택금융은 상업 「베이스」로 전환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자본자율화에 대비토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조성원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정책수단으로 이용. 한편,

취득과세(취·등록세)는 주택거래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유과세(재산세)는 주택의 과소비, 과다점유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양도과세(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선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보완.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확대 적용
-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거래정보를 “대중화”할 수 있도록 중개제도를 정비하고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

Ⅷ. 국토이용·관리

1. 계획수립의 배경

□ 국토이용·관리의 문제점

- 사회·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용지(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의 공급부진

'80대비 '88도시적용지증가: 15.3%	'80~'88기간중 공업용지증가: 31.5%
동기간중 도시인구증가: 30.5%	동기간중 공공용지: 20.3%
동기간중 GNP증가: 102.0%	동기간중 택지증가: 8.0%

- 수요발생지역과 공급가능지역간의 불일치로 지역적 수급격차 심화(수도권 등)
- 투기적 동기에 의한 불건전한 거래 만연으로 지가양등 및 시장의 불안정
 - '80~'88기간중 매년 전국토의 6% 이상이 거래되어 이웃 일본의 약 10배에 달하는 높은 거래율
 - 1인당 GNP 대비 도시지역 주거지 평균가격은 지가고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3배 이상(1986년 기준)

- 국토자원관리의 비효율성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및 정책실효성 제고에 장애
 - 국토이용계획의 선도적 기능미흡 및 계획행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마찰 유발
 - 국토관련 정보의 부실 및 정책수단간의 연계성 부족

□ 향후 여건변화전망

- 공개념 관련입법의 본격 시행으로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의식과 갈등증대 예상
- 토지이용행태의 변화예상
 - 소득증대 및 차량보급확대에 따른 위락적 용지수요와 공공용지 수요증대
 - 농산물시장 개방관련 농지이용구조의 변화: 밭의 감소 가속화 전망.
- 지자체실시와 관련한 주민의식 및 행정행태의 변화전망
 - 개발수단의 지방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이해상충 가능성
 - 지역환경보전 및 지역이해에 대한 주민의 권리주장 비등예상

2. 계획의 기본방향

-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경제활동을 선행적으로 수용하는 용지공급 확대
- 국토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능강화
- 국토자원의 공공성 인식확대와 부동산투기 근절로 토지시장의 안정
-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절약적 토지이용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

3. 국토이용 수급계획

□ 주요용도별 용지소요전망

- 540만호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약 320km²
 - 산업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공업용지: 약 90km²
 - 공공시설확충 및 국민편익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약 760km²
- } 약 1,200km²

□ 개발가능토지자원추정

- 도시계획구역내 미활용지: 약 325km²
- 도시계획구역내 농경지전용가능면적: 약 430km²
- 도시근교 구릉지: 약 640km²
- 시공중인 간척·매립면적 중 공업 및 도시용지: 약 104km²

약 1,500km²

□ 국토이용 수급전략

- 농지와 산지의 선별적인 전용활용: 무리한 농지전용억제정책의 완화
 - 기간 중 도시 및 공업용지 등으로 농지 약 610km², 산지 약 390km² 전용
- 수도권 등 대도시권내의 용지부족을 체계적으로 해소키 위한 위성도시 건설 검토
- 장래수요에 대비한 적극적 국토확장 추진: 도시 및 공업용지로의 활용도모
 - 261개지구, 1,179km²: 2001년의 국토면적 100,442km²
- 지역균형개발목표에 부합토록 지역간 공급물량조정
- 기존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수급격차완화

4. 제도개선 및 정비

□ 토지공개념의 정착과 발전으로 투기풍조의 근절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철저한 집행과 세부사항의 지속적 보완
- 토지관련 기존세제(종합토지세제 등)의 보완·강화
 - 비업무용·업무용 구분의 합리적 조정으로 합산과세확대 검토
 - 과표의 조기 현실화로 조세의 정책기능 제고
-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부동산문제 접근으로 투기대책의 종합화
 - 일반 조세·금융수단에 토지정책적 기능부여
- 공공토지선매의 활성화 및 국공유지 비축확대: 장기임대제도 도입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정립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 현행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체계의 통합·일원화 추진

도시기본계획+국토이용기본계획(중앙): 전체적 차원에서 장기적 방향제시 및
개략적 용도구분

도시재정비계획+국토이용시행계획(지자체): 구체적 행위규제

- 지자체 실시에 대응한 행위규제방식의 다양화
 - 수단의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위양: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융통성 부여

정책운용기반의 정비

- 공시지가체계의 정착과 관련제도에의 적용확대
- 토지거래신고대상구역의 전국확대: 신고자료를 관련행정근거로 활용
- 장기행위제한토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 강구
 - 현행 G/B내 토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용지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검토(매수청구권부여 및 국공유화 신중검토)
- 전국토지의 거래·소유·이용·가격 등 제반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합리적 정책집행 기반확보

Ⅸ. 국토계획의 공표에 따른 투기행위의 방지대책

1. 단기대책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의 전국적 확대 지정

- 현재 전국토의 83%에 신고구역 지정
- 토지거래 규모, 목적, 가격의 철저한 관리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의 확대 지정

- 현재 전국통의 41.3%에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
-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통제강화
 - 토지거래 허가기준의 강화
 - 공공 선매권의 발동
 - 공공개발 공급토지에 대한 환매권 강화

공시지가제도에 의한 지가관리의 강화

주요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및 제3섹타에 의한 합동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2. 장기대책

토지공개념제도의 철저한 시행

-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양도소득세제, 종합토지세제 등의 철저한 시행
- 과표현실화의 조기 추진
- 전국의 토지거래, 이용, 가격 등 제반 토지관련 정보체계의 신속한 구축

공공의 토지비축 확대